

국제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발전 전망*

金昌洙*

1. 국제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

1993年 12월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은 아직 구속력을 갖추는 정식 발효시점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자유무역을 기저로 하는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 또는 기업 단위로 보면 종래의 시장구조, 정책지원 환경, 경쟁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을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 협상도 제품·서비스의 질적 변화는 물론, 생산비용 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환경 변화의 주도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 엔화의 가치 절상, 중국경제권의 급부상, 클린턴라운드 등이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도 본 연구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압박해 있다고 느껴지는 예측 불허의 사태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컴퓨터시뮬레이션 연구소장 W. 카플러스 박사의 저서인 「과멸 예측의 한계」에서는 에이즈, 인구 폭발, 세계적 경제 공황, 파괴적인 지진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경영이 '무국적 기업', 또는 '지구적 기업'으로의 발전이 확산될 추세에서는 어느 국적의 기업에 대해서도 이들 문제는 심각히 받아들여져 대처해야 되는 예측 불허의 사례들이다. 정보공해도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DB 조작, 사생활 침해 등 이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예상할 수 없는 다른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더우기 21세기에는 '다민족 융합 사회' 등장이 예상되기도 하여 이에 의한 에이즈·마약·폭력의 확산에 따른 예측 불능의 기업환경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향후의 기업 환경은 예측 불능의 특이 사태가 더욱 증가할 것임은 물론, 우루과이라운드·그린라운드·중국경제권의 급부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판이한, 우리 기업에게는 익숙치 않은 지구적 규모의 복잡다기한 기업환경 결정 요소들로 나타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 최근 본 연구원 발간의 「대기업 그룹의 성장력과 사업구조」 1993. 3의 제4장을 발췌한 것임.

** 연구위원으로 「기업경제」 및 「HRI 포럼」 편집위원장. 美 서던 일리노이大 경제학 석사.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산업경제 전공.

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는 우리 산업계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그린라운드·클린턴라운드, 엔高 현상·중국경제권의 급부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1993年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5 단계의 과정을 거쳐 1995年 7월에 정식 발효되면 각국은 새로이 정해진 국제규범에 따라 자국의 제도를 조정하게 된다. 먼저 UR 최종 합의안의 준거 원칙들과 제규범 시행을 위한 경과 조치를 살펴보고 이어 우리 기업에 미칠 경영환경 변화를 예상해 보기로 한다.

UR 최종합의안(1993. 12)의 준거 원칙

“자의적인 무역규제의 여지를 축소시켜 세계교역의 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틀을 완비한다”는 UR 협상 목표하의 최종합의안은 다음과 같은 준거 원칙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UR의 기본 틀을 조사해 보면 협상 참여 117 개국은 타국에 대해 자국 시장 참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제도적 지원을 시정하며, 지적재산권 등 권리 보호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

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거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개도국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등 합의에 따른 마찰, 일방적 피해, 선진국의 횡포 등이 우려되어 각 지역·국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곁들여 있음이 나타난다. 몇 가지 부수적 고려사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 규범을 가능한 한 빨리 정착시키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 허용 보조금 : 연구개발·지역개발 등을 위한 보조금 등 모든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은 허용·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산업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75%까지, 경쟁전 단계 개발에 대해서는 50%까지 보조금 허용 -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8년, 개도국은 2003년 이후 규제, 극빈개도국은 미적용
- 투자 조치 :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의무 조항, 수입제품 구입 사용을 수출액(수출량)에 한정하는 수출입 균형 요구를 금지 -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7년, 개도국은 2000년, 후발개도국은 2002년 이후 금지
- 지적 재산권 : 개도국은 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자국민보다는 불리하도록 대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1998년까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됨

○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사전에 방지하면서
서 실효성 있는 규범을 마련한다.

- 반덤핑 규정 : 수출국에 대한 원가 이하 판매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상 거래로 인정, 우회덤핑에 관한 기준의 객관화·명료화
- 긴급수입제한 : 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에 피해가 급증함으로써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자국산업의 경쟁력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최근 발동후 3년간은 보복조치 불허

<표 1>의 경과조치 조항을 둔 것도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시행중 무역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WTO(세계 무역 기구)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구를 두어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선진강대국이 GATT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력으로 GATT 규정 밖에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빈번한 국가간 무역분쟁의 소지를 우려한 데 기인한 것이다.

예상되는 경영환경 변화

UR이 국가 상호간 시장참여, 공정경쟁, 권리 보호를 가능한 최대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무역 관행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의 격화를 들 수 있으며, 부문에 따라서는 시장참여 기회의 확대, 성장사업 참여에 있어서 경영여건 불리라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① 시장 경쟁의 격화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격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결과가 예상된다. 한 형태는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해당 산업중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다른 형태는 해당 산업 중 경쟁력이 강한 특정 분야에 특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의 상황은 기계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이 업종이 UR이 금지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정부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국산 기자재 사용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차등, 국민투자기금중 중화학공업시설자금, 특별 설비자금, 섬유산업 근대화 자금 등이 바로 이들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이 수출될 경우에는 무역금융, 수출보험제도, 수출자금 대출 등 17개의 제도지원이 있는데 이 중 12개가 금지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이들 품목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면 이들 중소기업은 기존의 24개 지원제도 중 6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제도지원 범위가 축소될 것이다. 이 외에 상계관세 적용 가능성

<표 1> UR 협정 시행의 경과 조치

	구 분	기 준	개 도 국	한 국
시장 참여 규제 완화	농산물관세화 및 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 이후 6년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평균 36% 인하 6년 동안 국내 소비량의 3~5%만큼 현행 관세 적용 보조금 감축 : 국내 보조금 6년간 20% 삭감, 수출 보조금 6년간 36% 삭감, 보조금 지원받는 수출물량 6년간 21%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 이후 10년간 관세화 유예, 이기간 쌀 수입 1~4% 최소시장 접근 허용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제협상을 통해 결정 쇠고기 시장 2000년까지 완전 개방
	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2004년 기간 MFA의 섬유 쿼타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nkel안 지지
	투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이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 2000년 이후 금지 후발개도국: 2002년 이후 금지 	
	원산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원산지 향후 3년내에 마련키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주기로 점차적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통신·운송 등 8개 분야 78개 업종 1995년 개방
	정부조달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입찰에 96년부터 외국기업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특별 구매, 농산물 구매, 한전의 일부 중전기기 한국통신 통신장비 제외 97년 이후 참여
공정 경쟁	공산품 관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 이후 5년간 각국 평균 관세율 1/3 이상 인하(86년 9월 관세율 기준)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농업장비, 맥주, 증류수 등 8개 분야 75개 품목 5년내 무관세화 화학제품 분야 관세 5~15년 동안 0~6.5%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관세율 41% 인하(양허 관세율 86년 17.9%에서 99년 8.2%) 맥주·증류수 제외한 6개 분야 67개 품목의 무관세화 참여하되 8~10년의 이행기간 확보 화학제품은 196개 품목 중 193개 관세조화 참여
	보조금 및 상 계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지원, 국산품 사용 촉진 및 수입억제 보조금 98년 이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同 2002년 이후 금지 특정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간 3.25%를 초과하면 수출보조금 WTO 설립 협정 효력 발생일 이후 2년내 금지 	
	긴급수입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율규제 조치는 1998년 이내 철폐 		
	권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발표로부터 1년간은 실시 유예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발표로부터 4년간은 실시 유예 가능

이 큰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면 기계 업종은,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시장 진출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설중장비는 특정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분야인데 이번에 관세 0%로 되어 신진국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을 배제할 수 없다.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기계류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변압기를 제외하고는 시장 잠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로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는 분야에서의 특화 현상이다. 그 형태는 품목 종류나 질적 등급, 또는 특정 기능 측면일 수도 있다. 가전·정보 기기 등 전자제품,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분야와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시장 또는 기능 분화가 예상된다.

특히 내구소비재 분야는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는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력 등 핵심역량을 보유하거나 전략적 사업 전개가 아니면 기업이 성장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분야로 비쳐진다. 다행히 이들 품목은 이번 UR을 계기로 해외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연구개발-생산-판매의 범세계화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② 수출시장 확대

UR의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보면

우리의 수출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UR 타결후 10년간 약 225억 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와 8억 달러의 추가 수입증대 효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145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업연구원(KIET)은 매년 50억 달러의 추가 수출 증대와 5억 달러의 추가 수입 증대로 45억 달러의 무역수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對美 수출시장 전망에 있어서 상공부 분석에 따르면, 1995~2004년 기간 매년 5억 달러의 추가 수출 증대와 1억 7,000만 달러의 추가 수입 증대로 3억 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수출증대 부문은 제조업 부문 총 수출의 6.8%인데 반해, 수입증대 부문은 제조업종 수입의 0.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의 관세율을 수준이 UR이전에 비해 33%정도 인하될 것이며, 철강 등의 부문에서 관세 장벽이 철폐될 것임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UR이 농산물, 금융, 유통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산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1.0%내외, 수입증가율은 0.3~0.6%로서 0.4~0.7%의 무역수지 증가폭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리하여 0.3~

0.4% 증가폭의 GNP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별로 볼 때 반덤핑 발동 요건의 강화는 수출시장 확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2년 중 반덤핑, 까다로운 수입절차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하에 있는 수출이 총 수출의 8%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 폴리에스터 등 섬유·의류 제품과 유기화합물·유리·철강, 컬러 TV·반도체 품목에 대해 빈번하게 규제를 해 왔었다.

선진국의 수출자율규제 폐지로 자동차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 반면 섬유제품은 쿼타제가 점차 폐지되는 데다 개도국과의 경쟁으로 수출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조선 분야는 전반적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주요 수입기자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져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로 인한 수출 증가가 반덤핑 제소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③ 신규사업 참여 기회

UR 타결의 영향 가운데 우리 기업이 당면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앞으로의 사업전개 방향이다. 사업의 내용, 구성, 범위에 따라 향후의 사업 성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첫째, 성장유망성이 큰 서비스 산업의 많

은 부문이 시장개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는 지식 집약적인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둘째,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공업발전기금 등이 기초산업에 대한 기술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응용연구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첨단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면 컴퓨터 등 정보산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UR은 기초산업에 대해서는 총비용의 75%, 신제품 개발단계 이전까지의 '경쟁전' 단계에서는 50%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중인 차세대 원자로, 신에너지, 환경공학,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등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부부담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 개발계획 부문 역시 향후 우리 기업의 성장 산업에 속하고 있다.

셋째, 공산품 관세 인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부문 역시, 향후 90년대 우리 기업성장의 주도 부문이다. 기계 산업의 발전 없는 공장자동화(FA)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FA 산업 역시 2000년대 초기 우리 산업 성장의 선도 부문으로 기대되어 왔었다.

넷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전략적 제휴를 통하지 않는 한, 선진국 기업과의 자본·기술 제휴에 의한 신규사업 진출 여건도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여

건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고유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략 경영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해지게 될 것이다.

블럭경제권의 형성

1993年 1月 유럽연합(EU)이 시장통합을 이룩했고, 1년 후인 1994年 1月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정식 발효되었다. 완전한 경제 통합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시장 통합 내지 역내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초기 단계에서는 역내 국가들에게 내국인 대우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역외 국가들을 차별대우하는 무역규범들을 내세우고 있다.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역외 협상력을 강화하고 역내 국가들은 공동의 단일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으로써 규모경제의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NAFTA에서도 EU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원산지규정이 강화되면서 역내 무역의 관세 철폐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對美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공산품 관세율 조화 또는 철폐 조항에서도 비슷하다.

NAFTA 발효로 컬러TV(20인치 미만), 라디오, 카세트 등 가전제품과, 승용차 및 부품, 의류 등 산업에서 멕시코産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비교적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역외국에 대해서는 현지투자도 제한하여 부품업체 진출이 쉽지 않다. 컬러TV 품목도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해 오던 것으로 북미시장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발전이다. 1992년 100만 대를 돌파한 멕시코는 세계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 확대 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미지역의 자동차 공급기지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NAFTA의 현지조달 비율 규정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 지역을 컴팩트 카 및 경승용차 생산기지로 특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도 자동차 산업이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이곳 진출 기업들에게 값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 요청에 응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기업도, 미국의 빅 3도 멕시코를 핵심 생산기지로 삼는다는 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

그린라운드의 출범

UR을 종결시킨 관세무역일반 협정(GATT) 체제는 이제 GR(그린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R이 가시화되려면, 현재 OECD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과 자유무역 문제의 조화방안의 논의가 결론이 나와 하므로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5년에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전문에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역개발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함께 가칭 무역환경위원회를 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도 1993년 7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UR을 이을 GATT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제안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외 내용을 담은 클린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주제는 독점금지 등 공정경쟁 관련 정책, 기술과학정책, 투자정책, 노동정책, 환경보호정책 등 5개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환경과 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룹들도 GR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이다.

GR이 제안되게 된 근본 원인은 “각국이 서로 다른 환경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통상에서 대외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미국 상원의원 막스 보커스의 연설(1991년 10월)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국가간의 환경비용 부담격차를 상쇄하는 무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GR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가 무원칙적이고 불공평하게 발동됨으로써 이해당사국간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세

계무역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GR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

현재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5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 무역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17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3년말 현재 2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기후변화협약(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폐기물 및 기타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 덤핑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4년 상반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6개의 핵심적인 국제환경협약 가입을 완료하게 된다.

GATT의 관심 분야

UR의 보조금 협정에서 환경보조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과 환경간 서로 마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산공정이 보호무역용인지 환경보호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료한 틀이 없으면 끝없는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UR이 보완되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뜻한다.

GR에서 논의될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환경관련 규제의 투명성과 명료성 보장, 제품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규제의 기준, 환경보조금 및 환경마크 부착·포장규제 등의 적법성 기준, 분쟁해결 절차의 보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별 환경기준에 따른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비용 차이만큼은 상계관세로 징수하는 문제가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ATT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강제 집행권과 다수결원칙이라는 의결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린라운드가 예상보다는 빨리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처하는 정부 및 기업의 대응자세도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움직임

미국은 GATT 20조인 '자유무역의 일반적인 예외조항' 등에 근거로 「신대기정화법」(1990年)을 제정하여 1996년부터 미국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은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기준(27.5마일/갤런 → 40마일/갤런)을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이 기준에 미달되면 미국向 수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환경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국제오염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법 슈퍼

301조의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를 환경슈퍼 301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유럽연합(EU)은 1993년 12월에 포장폐기물의 회원국간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조치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1991년 6월 「포장쓰레기 규제법」을 제정, 국내생산·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포장재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는 이 법의 대상범위를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고 1995년부터는 자동차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환경보호 입법과는 별도로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 중인 국제환경표준화 제도 즉, 「ISO 1800시리즈」가 그것이다. 이 작업 역시, 영국·네덜란드·독일 등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강제인증제도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표준화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표준화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환경관리 체제와 활동이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공식 인증해 줌으로써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리스크의 저감

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산업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품질관리표준(ISO 9000)이 품질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경표준은 사업활동 전역에 대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건설업, 해운업 등 모든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환경표준은 환경법규에 반영되어 그 시행에 강제성을 띠는 것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경영환경 변화

환경보호라는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업구조의 모습이 아니라 필히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의 고려 없이는 수출도 생산도 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에 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1994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가입할 6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GR의 기초적 규범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환경표준화 제도는 우리 기업이 당면할 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국제환경표준화는 우선 선진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기업과 현지진출 기업부터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일찍부터 자율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해 온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최고경영

자의 경영마인드를 혁신하고 환경관리조직을 보강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품 설계와 신사업 계획시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환경규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기관에 제출하고, 녹색소비자운동을 주관하는 민간 환경단체들에게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외부 환경감사인을 통한 객관적인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이들 모두가 추가적인 비용, 인력, 시간을 초래할 것이다. 업종으로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석유화학산업을 필두로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철강과 자동차산업, 희귀자원과 有害화학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하는 전기·전자 산업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품제조업 등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한국·일본·중국 간의 산업구조 조정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100엔/달러 수준을 향해 갈 것이며, 중국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기술력·마케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도 중국식의 시장개방을 준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제권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제무역상의 규범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면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100엔대 수준의 엔화 가치가 미칠 영향

현재 외환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엔화가 장기적으로 100엔/달러 수준을 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받아들인다면 1993년 중에 볼 수 있었던 한·일 간의 수출 구조의 변화와 일본기업의 대처 방향은 앞으로의 양국간 산업구조 조정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우리 기업이 당면할 환경 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기업의 대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본기업은 자재·부품의 조달을 해외 수입을 통해 대폭 늘리고 있다. 특히 선박 건조 및 건설용 철강재 수입을 한국으로부터 크게 늘리고 있다. 선박 및 선박용 엔진도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 발주 증가는 일본식의 수급기업간 공존공영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어 엔고 영향이 예전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재는 채산성이

맞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본 산업구조가 첨단 소비재 및 서비스 위주로 전환되어 갈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해외 생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메이커들도 차기 주력 상품인 16M D램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생산을 주저하다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 최대 전자부품 메이커인 알프스전자 사례가 일본기업의 해외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생산기지의 단순한 해외이전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 대상 지역도 북미·EC 지역에서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OEM 조달은 물론, 연구개발·판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엔고 현상으로 나타난 한·일 무역구조상의 특징 변화와 그 영향은 어떠한가? 그동안 일본 경제성장에 주역을 담당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일부 가전 등 산업부문에서 일본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한국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점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비록 고가품은 아니나 후발개도국이 생산해 낼 수 없는 것들이어서 엔화 가치 변동이 우리 산업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 제품은 부품 수입의 對日 의존도가 매우 낮고 생산성도 높아 엔고 이전에도 우리 기업의

대의 경쟁력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의 성장주도 산업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석유화학 산업도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산업부문이다.

가전에서는 20인치 이하의 컬러TV, 2헤드 VCR 등은 후발개도국에 넘겨주었지만 20~30인치의 TV나 4헤드 VCR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품목들이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16M D램 양산기술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폴리에틸렌 등 범용수지 가격은 한국 제품이 30~40% 정도나 저렴하게 되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1993년 상반기 기간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의 판매가가 철강 20~30%, 반도체 10~15%, 자동차 3~4%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1993년 수주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다음은 한국의 부품수출 증가 현상이다. 이는 일본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수입을 크게 늘린 결과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한국기업이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겪은 엔고 경험을 통해 중간재, 특히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절감하여 국내생산기반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기계·산업전자 산업부문의 완성기계 제조업은 엔고가 부품수입 원가 부담을 증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지만 일부 부품 메이커들은 엔고가 對日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 수출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센서류, 로봇트 컨트롤러,

CNC 장치, 서보모터 및 드라이브 등 자동화기 관련 핵심부품이 이들의 한 예다.

낮은 국산화율, 높은 對日 수입의존도로 인해 수출확대 유망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 증가가 위축된 캠퍼드의 사례가 보고되어 국내 기업들은 수출유망품목의 국산화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를 줄이지 않고는 완성품의 對日 수출 위축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여 기계류에 있어서도 외산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기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적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UR체제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허용이 되는 시점(빠르면 1997년)까지는 보호육성기간이 4년 정도 여유가 있을 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엔貨 가치가 장기적으로 100엔대 수준을 향해 간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을 주도해 왔던 산업들을 인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기업에서의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전수·공장이전도 對日 접근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경영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UR 무역체제가 적용되기까지는 빠르면 4년 정도의 여유를 가져 경영자원, 나아가 정책지원은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전략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영향

중국경제가 1978년 개방정책 채택 이후 14년간 연평균 8.7%의 성장을 이루어 1인당 GNP는 실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991년 현재 1,000달러(통계치는 4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중국경제 규모는 2010~2020년 기간 중에 일본의 경제규모를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GATT에 가입하여 UR체제 하에 들어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한국·중국·일본 3국간은 경제적으로 보완을 이루면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을 90년대 성장 주도 업종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 계획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안이다. 중국은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이 끝나는 2000년에 승용차 200만 대를 포함한 연산 30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승용차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한 반조립 생산과 그후 단계적인 완전조립 생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개발 능력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승용차 수출산업화 계획에 그동안 3개의 대규모 집중화 공장(3大), 3개의 소규모 공장(3小), 2개의 경자동차 공장(2微)을 지정하였다. 여기에 폴크스바겐의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90년대 세계 전략을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후는 중국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생산규모를 1990년대 300만 대에서 2000년까지 435만 대로 확대시키고 중국을 주요 시장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폴크스바겐은 길림성 장춘과 상하이 두 곳에 합작사업을 선정했다. 이 외에 프랑스, 미국, 일본 기업들이 자동차산업 분야에 걸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목표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산업에 있어서도 선진국 기업의 中國 진출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일본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인 NEC는 중국 북경 근교에 합작공장을 세워 4M D 램을 조립 생산한다는 계획을 1993년 7월에 발표하였다. 그 이후 마쓰시타는 중국 大連의 합작부품 회사를 통하여 9개 중국업체에 VTR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관련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이해 11월에 발표했다. 중국의 전자산업 생산은 1993년에 총 36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5년까지는 연평균 136%씩 성장, 2000억 달러에 달

하게 되며 수출은 1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만의 「經濟日報」 1994. 2. 23).

중국의 조선산업은 현재 건조능력·건조경험이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한국이 경쟁상대국이 되지는 못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탱커·벌크캐리어 등의 선종에서 위협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생산관리기술, 건조기법을 흡수하고 있으며, 독일로부터는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독일 실크社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기술 난이도가 높은 액화가스 운반선의 건조기술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예상되는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의 발전은 우리 기업에게 중국 시장 진출, 글로벌 사업 구축이라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경쟁자로 등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 국제분업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망

국내 산업 발전과 산업 구조

기업의 사업구조 발전은 경제 전체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사업구조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데 있어 산업의 생산규모와 성장 추세 그리고 산업간의 관계는 산업구조의 분석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산업구조는 기업을 포함한 각 부문의 활동 성과가 산업간 구조

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업경영의 투자 방향은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 증가, 기술 발전, 경쟁력 전망 등은 그 이후의 산업구조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발전 추이를 통해 얻는 정보는 기업들의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잠재력·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부는 선진국 경험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특정 산업구조로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엔高的 영향, NAFTA 등 지역블럭화,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처하면서 UR 규범이라는 자유무역의 국제환경에서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향후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자유무역체제에 부응하면서 보정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변화 및 수요·기술혁신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 제공, 부문內·부문間 정보교류 촉진, 정보통신망 등 사회간접 시설의 기반 구축,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정책의 마련, 산업·무역 활동의 조정 및 활력 부여, 국제협력의 여건 조성 등 측면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장래의 산업구조 모습은

현재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별 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는 가운데 그려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최근 국내 산업 가운데 엔고 등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산업 부문에서 경쟁국, 후발개도국에 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 방향이 조정돼야 하는 것인가이다. NAFTA 등장에 따른 멕시코의 위협, 중국경제의 부상이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해준다.

둘째, UR 규범하의 국제경제는 국경없는 시장·생산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범세계적 생산체제·시장 접근에 의해 국내 경제가 위협받게 될 때 기업 경영전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사업구조 발전 방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셋째, 앞으로의 산업은 서로 기술적으로 융합되거나 복합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이 비교적 뒤떨어진 첨단 서비스 분야에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산업이 이러한 세계적 기술·산업 발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가이다.

성장주도 산업의 발전 전망

○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중국·ASEAN 국가들이 급속한 시장·생산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다. NAFTA체결로 이제 멕시코는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중국 자동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에게 시장 진출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자동차 산업 재편을 예고해 주고 있다. 현재 소형 승용차 위주의 생산체제가 앞으로는 소형차의 高級化나 중형 승용차 생산체제로 옮겨가야 하는 경쟁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추세가 개성화·다양화, 전자기능화 발전으로 나아가 현지 수요에 대응하는 마케팅과 디자인 연구를 겸한 글로벌 연구개발-생산체제의 구축 없이는 경쟁력 있는 생산 기업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조선

엔화 가치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이 조선이다. 이 영향으로 1993년 우리나라 조선 수출액은 조선大國 일본을 따라잡아 세계 제 11위의 조선국이 되었다. 이는 수출선박 국산화율이 80%에 이르고 있

는 데다, 기자재의 對日 수입의존율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산 철강재를 공급 받고 있는 데 힘입어 일본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앞선 데 기인한다. 앞으로는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二重선체 유조선의 발주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수주가 꾸준히 늘어날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안정된 造船 강국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후발개도국인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기업에 비해 다양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독자적 설계기술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산잠수함(1992년) LNG선(1993년)을 건조하여 특수선·고부가가치선의 건조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고속여객선 등 다른 고부가가치선으로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고 기자재 공급 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차세대 선박 건조 기술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발전단계에 있다.

○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3년 6.6%에서 1998년에는 8%로 더욱 높아지는 전망(산업연구원 전망)을 보이는 성장유망 품목이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1993년에 17.9%(D램은 23.6%)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여(「매일경제신문」 1994. 2. 19) 세계 정상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는 다른 경쟁국으로부터의 위협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 너무 치중해 수출비율,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비메모리 분야 진출에 의해 수입의존도 개선이 필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모리 분야 성장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 품질관리 관리,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전용제품화, 질적 경쟁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 전략적 제휴라는 국제 협력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문형 반도체(ASIC)는 앞으로 통신 분야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동화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미래의 핵심기술이다. 특히 DSP(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는 향후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D램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제로서 반도체 제조장비와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들 수 있는데 현재 日·美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발전 수준은 대만보다도 뒤떨어져 있어 UR체제하에서 어떻게 이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 철 강

철강산업 부문도 핫코일 등 품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다. 엔高로 인해 조선용 후판인 강재는 대만보다도 20%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냉연제품은 ‘좀 더 가볍고 얇게’ 만들어야 하는 품질 문제가 있으나 가격 경쟁력은 세계 주요 경쟁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제는 중국진출 등 국제화 확대 단계에 임하고 있다.

반면, 고급강의 생산기술 수준의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가 향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고급강의 생산비중은 26%(1992년)로서 일본의 3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품질면에서도 자동차용 고장력 강판의 경우 일본의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각국은 용융환원 제철법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러한 차세대 제철기술 개발에도 가일층의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UR 규범하의 기업 경영전략과 산업구조의 발전

UR 규범하의 자유경쟁 무역체제는 우리나라의 기계, 전기·전자, 섬유 산업 분야에서 다기화된 모습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전망이 비교적 불투명한 편이다. 공장자동화, 정밀화학, 항공기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로 이들 산업군은 빠른 기술혁신, 수요변화, 경쟁축의 변화로 인해 시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데다, UR하의 자유무역체제로 국제분업·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산업군은 기술의 융합화, 시스템화/네트워크화, 지식화가 활발한, 전통적 산업부문으로서 기존의 경영전략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공급자 환경을 맞고 있다. 수요 측면을 보아도 소비재는 편의성·건강성·감성화 중심으로, 자본재는 작업의 용이성·기능의 복합화·고속화·유연성,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환경조화형이 요구되어 산업생산이 정보화, 자동화는 물론 신산업의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개별기업은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전략적 제휴·글로벌 경영이 주요 경영전략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들 산업군의 발전 전망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개별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 기계

이 부문은, 위에서 말한 자본재 기술 발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작업환경에 적합한 기술이 개발되어 그것이 바로 이들을 사용하는 수요업체의 생산성 증가로 유도되어 내부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성 향상 필요성 때문에 수입에 의

존해야만 되는, 품질 수준에 수요가 매우 민감히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체제 하에서는 강한 국제분업 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장자동화 시스템은 기계, 전기·전자,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계가 상호 관련되어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하고, 국내 수요도 불안정하여 소위 경영·판매·기술 면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내 기업이 이러한 파트너십 형성에 일원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한다면 이 부문의 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일반기계류도 큰 범주에서 보면 이상과 같은 발전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계류를 일본에 의존해와 국내산업 발전 기반이 타부문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다. NC선반, NC밀링머신 등 범용형 공작기계와 굴삭기 등 건설용 기계, 섬유기계·농업용 기계의 일부, 그리고 플랜트 관련 기자재와 중저급의 일반 기계부품 중심으로 발전되어와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국내 실정이어서 국제적 분업형 발전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현재 공작기계의 수치제어 화율은 49%로서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UR이 국내 기계산업에 영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이 1994년에 7.9% 수준이어서 관

세율 인하의 수입유발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무세화된 건설중장비·농업기계,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철폐와 금지 보조금 규정에 따른 공작기계·섬유기계,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중전기, 유예기간 없이 관세를 평균 65% 인하해야 되는 과학장비 등은 국내 산업 구조가 크게 변모될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즉, 공작기계·섬유기계·건설중장비 등은 수출품목 중심의 특화체제로, 농업기계, 중전기, 과학장비 등은 내수의존형의 전문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가전

전용적으로 독립적인 기술 발전을 해오던 이 분야 산업들은 이제 기능이 융합·복합화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화되고 시스템화·네트워크화되고 있다. 개인 지향의 생활흐름을 소비자 기호 변화로 인식하면서 편의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재·서비스 공급 산업의 신규 창출이 가능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규 가전제품은 이상과 같은 추세와 무관치 않다.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컬러 TV → IDTV / EDTV → HD-TV
- VCR → Super VCR → 디지털 VCR
- CD → LDP, MD, 디지털 CDP
- 카세트 테이프 → DCC(Digital Com-

pact Cassette), DAT

- 캠코더 → HD 캠코더
- 세탁기, 냉장고 → 인공지능화된 제품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합 기술 제품인 가정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전산화는 PC가 중추가 되고 여기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최근 출시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는 2대 이상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연결할 수 있으며 100개가 넘는 TV채널을 제공, 앞으로 다가올 위성방송 시스템까지 포괄한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필름을 컴퓨터에 저장해 HD-TV 수준의 화질을 즐기며, 나아가 비디오 및 정지화면 편집도 가능하다”(『매일경제신문』, 1993.12.8). 즉, 가전·컴퓨터·통신 기능이 복합화된 멀티미디어 기기 산업의 향후 발전 잠재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 멀티미디어 산업은 그 이상의 영역과도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상 분야는 방송, 출판, 음악, 영화 유선 네트워크까지 이른다.

이렇게 멀티미디어는 향후 전자·정보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할려면 다

양한 미디어間 實시간에 고품질의 송수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광대역 디지털 종합정보통신망(B-ISDN)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민간기업들은 同종 또는 異업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련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미디어 분야가 가전, 컴퓨터, 통신 등 분야를 통합하고 있으므로 한 기업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소요 투자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길어 시장진입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일본·EU의 다국적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전략적 제휴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 첨단기술 제품이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으나 이제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제품, 시장경쟁이 가능한 가격 위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객만족 기술혁신을 위한 조직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광대역 디지털 종합정보 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고, 기업들은 그 기반 위해 경영전략과 조직을 새로이 가다듬고 기술혁신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다.

○ 컴퓨터 및 통신기기 산업

컴퓨터 부문의 기술 발전은 컴퓨터 자체

의 가격 對比 성능 향상, 컴퓨터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활용성의 다양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각 발전방향의 기본축을 살펴보면 성능향상은 명령어 축약형 컴퓨터인 RISC 중앙처리장치, 스타일 변화는 아키텍처의 개방화, 활용성 다양화는 통신의 컴퓨터 활용으로 대표된다. RISC는 현재 일부 워크스테이션에 적용되고 있는데 RISC칩을 여러개 사용하는 컴퓨터는 중대형 컴퓨터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분산처리 물결로 인해 앞으로는 대형 컴퓨터보다 중소형 컴퓨터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고, 자사는 특수 전문 분야에 특화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국내 컴퓨터 기술 수준은 1992년 현재 소형 컴퓨터가 선진국 수준에 대해 3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기술은 선진국의 30~40% 수준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최근에는 경쟁의 축이 가격 경쟁으로 모아지고 있는 데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PC 가격은 1990년 이후로 대만제품에 비해 계속 불리한 상황이며, 휴렛팩커드 등 미국 제품에 비해서도 크게 不利하다.

국내 기업들은 사업전략 전환,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PC보다는 워크스테이션, 나아가 중형컴퓨터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책과

제로 정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중형 컴퓨터인 타이컴은 병렬처리 컴퓨터의 초기 단계 제품으로 국내 각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기술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신기기 부문은 국가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사용되는 것을 위주로 정보화·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기본 설비이다.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이 없이는 통신망을 매개로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는 산업 발전은 가능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국설 교환기는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에 따라 전자교환기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광대역 ISDN을 위한 ATM교환기는 기존 교환 회선의 대체시기가 되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전송기기는 전송부문에선 무선 이용의 활성화로 수요 증가율이 감소될 것이다. 데이터 통신기기 및 이동통신 관련기기는 향후 2000년대까지 통신기기 분야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 분야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통신 서비스의 구조가 VAN 등 비음성 데이터 통신을 중심으로 한 고도통신 서비스 위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보면 1992년 현재集全자교환기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3년 정도 뒤떨어져 다른 기술보다는 비교적 앞서 있으나 부가가치 통신망(VAN), 종합정보통신망, 위성통신기술 등은 7~8년 격차를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주문형 반도체, 고주파 신호처리부품, CCD(전하결합소자) 등이 취약기술로 애로가 되고 있다.

성장 유망 산업의 사업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으로서 대체로 공장자동화(FA), 정밀화학, 항공우주, 신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첨단서비스같은 신산업의 출현이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여성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등 생명 위협 요인이 증가하며, 소비·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건강·감성·개성을 중시하는 소위 '21세기 소비행태'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신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신산업으로 영상소프트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CATV 등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등의 패키지 매체의 확산과 멀티미디어化에 힘입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이 산업은 더욱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화·감성 중시의 레저생활에 맞게 되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산업이 급격하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으로는 실버산업, 건강식품산업, 환경창조산업, 어린이산업, 스포츠·레저산업 등이 있다. 또한 개인생활지향의 정보·서비스 분야도 크

게 번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성장유망산업의 사업화에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의 개발과제가 있고 둘째, 누가 또는 어느 업종의 종사자가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 진출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셋째, 외국 경쟁기업으로부터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성장유망 산업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비교적 크게 발전되고 있고 중저급 기술로는 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상소프트 산업은 미국의 경우 대기업 그룹화되고 있고 일본도 그러한 구조를 쫓고 있다. 즉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미·일에 대항하는 산업조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분야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발생은 외국기업에 뺏기고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능력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발전과제이다.

누가 또는 어느 업종의 종사기업이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 진출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일본기업의 사업구조 조정 방향을 보면 FA산업은 공작기계·로봇 전문 메이커 이외에 종합전자 메이커, 산업전기 메이커가 오히려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정밀화학은 화학기업이, 항공우주는 자동차·조선 플랜트 업종 기업이, 신소재는 철강·화학·섬유 제조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종합전자업체와 종합상사

가 비교적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향후 성장유망 사업은 대체로 관련 사업 업종의 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 나타난다.

산업구조 고도화 전망

앞에서 살펴본 산업 분야별 움직임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도 하고 시장경쟁 환경에 맡겨질 수도 있다.

UR 규범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1998년 이전에 육성 효과를 최대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정부정책 방향이다. 주된 방향을 보면,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개발의 단기 실용화 지원, 국내외 기술교류 촉진 등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기술 개발의 지원 강화 등은 UR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경쟁력 강화에 기본 토대가 되므로 정부 지원책의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 기업활동 규제책도 완화하며 특히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전문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 시책은 1993년 중에 마련되어 그 기본 골격은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97」(1993. 9)에 발표된 바 있다.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산업별 특성이 고려된 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고 보고 관련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계획으로 정부의 「94년도 경제운용방향」(1994. 1. 11)에 나와 있다. 성장주도산업으로 자동차·반도체·가전을 중시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며, 신발·섬유 등 경공업도 패션화·개성화 지향으로 연구개발, 염색공단 조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형항공기 및 저궤도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도 착수하며, 초소형 PC·멀티미디어 등 신규제품 개발 중심으로 컴퓨터·통신기기 부문의 산업 발전에도 주력할 계획으로 나타난다.

또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제2차 기계류 국산화, 10大 생명공학 핵심기술 개발은 기술개발 및 정보화라는 산업발전 기반 강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5년까지 총 투자규모 44조 5,100억 원을 들여 초고속국가통신망 구축과 공중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통신은 1993년말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N-ISDN)을 개통한 바 있는데 광대역종합통신망(B-ISDN)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나타난 이같은 정책방향은 이미 1993년에 수립된 개별 산업정책방향의 한 부분에 그치지만 앞으로 나아갈 정부 의지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자동차·반도체·가

<표 -2> UR 이후의 정부정책 조정 방향

구 분	조 정 내 용	비 고	담당 기관
일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발전법」 폐지 추진 ◦ 정책금융, 재정으로 전환 ◦ 기업활동 규제 전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무역금융, 농어민·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1994년 상반기 관련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자원부 ◦ 정책금융위원회 ◦ 관련부처 ◦ 상공자원부
수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기계 「수요자금용제」 개편 ◦ 외국산과 구분 않고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과 구분 않고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자원부
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신고제 전환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차세대 기술도입 유도 위해 ◦ 조선 신·증설 자유화 ◦ 전국적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3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사업범위 확대 검토(83개→100여 개) ◦ 1994년부터 ◦ 1000만 달러 이하 사업은 신고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 재무부 ◦ 체신부 ◦ 재무부
무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보조금 단계적 폐지 ◦ 수입선 다변화제도 1998년까지 폐지 ◦ NAFTA 3국과 자유무역 추진 ◦ 사무기기 수출산업화 육성(~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보조금은 1995년부터, 수입대체 보조금은 5년 이내, 수출 보조금은 8년 이내에 철폐 또는 허용 보조금으로 전환(검토중) ◦ 258 품목 중 129개 1994년부터 해제, PLC 등 25개 첫 적용 ◦ 복합기능 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 경제기획원 ◦ 외무부 ◦ 상공자원부
농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보조금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보리·콩·옥수수·유채 등 5개 품목 대상 ◦ 10년간 매년 228억 원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반도체, LCD, 중형항공기, 다목적위성, 차세대 공작기계 등 5개 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 연구기술비 정부 보조금 총액 50% 내 ◦ 기술도입 사전 승인제 폐지 ◦ 단기 기술개발에 成功拂 지급 집중 지원 ◦ 중형항공기 개발에 공기업 참여 검토 ◦ 중형항공기 수출전략 산업화 지원 ◦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건식 섬유가공기술 개발(1994~2000) ◦ 선진기술개발시책 본격화 ◦ 정부차원의 국내외 기술협력 체제 구축 ◦ 청정에너지 집중 개발(~2001) ◦ 무공해 염색기술 개발(~2000) ◦ 핵심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규범에 맞는 기술정책 적극 개발 ◦ 「산업기술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3년내 상품화 가능한 것 대상 ◦ 상공부에 산업기술국 신설, 핵심산업 기술, 엔지니어링, 표준화, 시스템·에너지·환경기술 등 기반 기술 지원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호주 등과의 공식적 기술협력 체제 구축 ◦ 태양발전·바이오알코올 등 지원으로 2001년까지 청정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3%까지 확대 ◦ 물대신 탄산가스 이용으로 폐수 배출 절감 ◦ 2001년까지 시스템 설계 등 4대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경제기획원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 ◦ 과학기술처

전, 철강·석유화학, 섬유·신발을 우리 경제 산업성장의 주축으로 보며, 앞으로 항공우주·컴퓨터·통신기기가 산업 성장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별 지원 정책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을, UR이후 발표된 정부정책 조정 방향의 시각에서 보면 보다 분명한 정부 의지가 나타난다. 국산기계 「수요자금융제」 개편, 조선 신·증설 자유화, 반도체·LCD·중형항공기·다목적위성·차세대 공작기계 등 5개 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중형항공기 기업 참여 검토와 수출전략산업화, 건식섬유가공기술 개발, 기타 핵심산업기술·엔지니어링·시스템·에너지·환경 기술 등 기반기술 지원 강화 방향은 역시 반도체, 가전, 섬유, 항공우주 앞으로 계속 산업 성장을 주도하거나 주도할 산업 부문의 기술 취약성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조선·기계류 등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다.

정책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또다른 시각은, 일반적이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단기 기술개발에 成功拂자금 집중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이든 3년 내에 기술개발과 상품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성공불 자금은 기술개발과 상품화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지원 받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자금이다. 국내외 기술교류의 촉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對外 기술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

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호주 등 국가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정책은 UR이후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식되어지면서 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업종전문화 정책이다. 30대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시장경쟁 여건 개성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그룹의 경우, 비관련 업종 진출 분야가 선진국 기업에 비해 과다한 데다, 외형으로 본 매출규모·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크게 뒤떨어져 UR 이후의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 정책수립의 기본 배경이다.

1993년 10월에 확정되어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력업종제도의 기본 골격은 기업 그룹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1~10대 그룹은 주력업종을 3개씩, 11~30대 그룹은 2개씩 정하되, 주력기업은 주력업종에 속한 기업 가운데 해당업종의 사업비율이 70%이상이며 그 업종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 선정되도록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기서 본 정책의 핵심이 되는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되는 소위 '주력업체'는 주력기업 가운데 3개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들 주력기업은 정부가 정한 15개(단, 농수산업, 금

용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제외) 업종 분류기준에 따라 신규업종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및 국내 금융의 원활화, 공업입지,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주력업종제도가 산업구조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30대 기업 그룹이 주력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에서 기업 그룹들이 많은 투자 규모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발전 골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주력업종에 나타난 향후 기업 그룹의 사업투자 방향은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 분야에 가장 큰 비중(19.6%)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료품·자동차·에너지 및 자원분야가 그 다음 비중(8.0~9.8%)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정보·기계장치·철강 및 비철금속·비금속 광물제품 분야는 4.5~5.4%의 비교적 낮은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반면, 섬유 의복 분야에는 1개 기업 그룹에 의해 2개 주력기업만 선정되는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비제조업 부문으로는 무역·유통·운수 및 건설업 모든 분야에서 높은 주력기업 신청 비율을 보였다.

주력업종 신청에서 나타난 기업 그룹의 사업구조 변화를 보면 화학섬유 6개 기업이 화학업종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장치 분야의 주력기업들은 발전설비·조선·항공 등 분야에 대한 진출의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계전문업체는 주력

기업 신청에서 제외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UR 타결안에서 관세 무세화로 된 가구 분야에는 주력기업 신청자가 없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여신관리제도가 폐지되는 등 금융 자율화가 진행되면 주력업종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정책의 의지와 그와 관련된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은 기업 그룹의 주력업종 선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앞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정보, 철강, 화학 산업이 산업성장 주도 부문으로 더욱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강화된 분야에서의 시장진입 자유화 정책으로 조선 산업도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망

우리나라 경제는 엔貨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됨으로써 그동안 축적해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들 산업의 성장기반을 더욱 다지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의 기반 구축에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가전·컴퓨터·통신기기, 자동화기기·기계, 항공기, 정밀화학 분야가 바로 기술력을 제고해

야 되는 산업들이다.

이 즈음에 산업환경은 급속히 변하여 국제무역환경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UR 규범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어서 그린라운드도 개시될 예정이어서 국가간의 시장보호 장벽과 불공평한 경쟁질서가 시정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무역규범은 경제발전을 이미 상당 수준 이룩한 선진공업국에게만 유리할 뿐, 후진국에게는 산업화 보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개발여건면에서 불공평한 산업환경을 강요받고 있다. 비록 개도국, 후발개도국의 구분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이 허용되고 있으나 21세기에 들어가면 모든 국가가 시장개방 상태에서 경쟁하게 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UR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국내시장 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술개발 타당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기계 분야는 정부의 중단기적 육성 의지가 약하여 기대에 못 미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UR 규범에 앞서서 지역적으로 인접국가간에 UR 규범같은 자유무역 협정이나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블럭경제권 형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1994년에 재출범한 EU 경제의 탄생,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 발효이다. NAFTA협정 발효로 컬러 TV·의류 등 對美 주종 상품 수출이 중단기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

고 중단기적으로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 즉 NAFTA는 현재 주종 수출 상품에서 중단기적인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동북아지역 경제권 형성 가능성, 그에 다른 이 지역 국제분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의욕적인 산업화 추진과 이 지역 시장 잠재력을 노리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현지투자 강화의 모습을 보면 그 대상이 전자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석유화학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어 최근의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잡고 있다.

첫째, UR 규범에 부응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재조정하되 유예기간 동안 산업발전을 극대화하는 육성정책을 도입한다. 중단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상품화가 가능한 부문에 적극 지원하면서 자동차·반도체·가전, 철강·석유화학, 섬유·신발 등 현 단계의 성장주도 산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둘째,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통신기기·항공우주·환경산업 부문은 정부가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완성한다.

셋째, 국제경쟁력이 어느 수준 확보된 조선 등 분야의 시설확대, 기술개발은 업계의 자율경영에 맡긴다.

넷째, 30대 기업 그룹은 국제적 무한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그룹의 사업구조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섯째, 향후의 국가·기업의 경쟁력은, 국경을 넘는 전략적 제휴 없이 핵심역량으로만 배양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민간기업들도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나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다.

기계·자동화기기 분야의 정부지원정책은 다른 산업분야와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하기에는 그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이 산업의 발전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기업그룹들도 이 분야에 사업비중을 비교적 크게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력기업을 선정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분야의 對日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전문화 정책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업그룹의 비관련 사업 다각화 진출을 억제하게 된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첨단서비스, 생명공학 분야 진출이나, 기타 산업간 융합이 요구되는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때 전략적 비관련 사업 진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산업 출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단기적으로 기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1992~98년 기간 전망되는 산업 구조 고도화는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산업별 전망에 있어서 GNP 연평균 성장률은 UR 영향을 감안하여 6.4~7.4%로 하였으며, 이 경우 예상되는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은 7.4%로 보았다. 이는 이 기간 성장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볼 때 「신경제 5개년계획」(1993.9)은 광공업의 對 GNP 비중이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1년의 34.2%에서 1998년의 34.5%로 되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근거를 둔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전망치(「한국의 산업」, 1993 참조)가 제조업 연평균 6.7%의 성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기준의 산업부문별 성장을 전망치가 참고로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의 산업부문별 전망치(「21세기를 향한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1994 참조)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원의 HRI 조정치는 이들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앞서의 산업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해 나타난 결과이다.

전망결과를 요약하면, 향후의 산업구조는 항공기를 필두로,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표 3> 주요 산업별 성장률 전망(1992~98年)

(생산액 기준)

(%)

산업부문	對제조업 비중 ²⁾ (1991)	산업은행 ³⁾ 전망치	KIET ⁴⁾	H R I 조정치
섬유·의복 ⁵⁾	10.75	2.0	3.5	3.0
화 학	7.90	6.7	8.6	8.6
철 강	6.70	4.4	4.0	4.4
기 계	7.43	10.7		11.0
농업기계	0.49		11.3	
공작기계	0.35		11.0	
섬유기계	0.35		19.0	
건설기계	0.92		13.7	
전기·전자	14.58	8.7	-	11.8
전 기	3.20		-	13.0
전 자	11.38		12.1	11.5
가 전	6.91		8.6	
반 도 체	1.69		21.0	
컴 퓨 터	0.61		17.1	
통신기기	1.18		14.9	
수송용기기	7.71	8.1	-	10.5
선 박	2.13		5.0	
자 동 차	8.63		12.7	
항 공 기	0.21		25.0	
정밀 기기	1.00	8.4	-	9.2
全 제조업	100.00	6.7	-	8.4

주 : 1) 1992~98年 기간, GNP 성장률은 연평균 6.4~7.4%, 제조업 성장률은 GNP 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신경제 5개년 계획, 1993~97」, 1993. 9 참조)으로 전제함. GNP 성장률은 UR 기대효과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음. 각 지표의 성장률은 기준 년도의 불변 가격에 의함.

2) 1991년 기준(%)(「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1 참조).

3) 산업은행(1993)의 「한국의 산업」 참조. 이 전망치는 1993~98년 기간을 대상으로 함. 단 철강은 이 보고서의 부문별 전망치(1994~97년) 4.4%로 함.

4) 산업연구원(KIET)의 「21세기를 향한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1994의 산업부문별 전망치(1991~2001년) 참조.

5) 화학섬유 포함. 따라서 화학 부문에는 화학 섬유 제외.

등 전자 부문, 자동차, 기계류 부문이 10% 구조 고도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다.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이 9%(1991년)를 예상되어, 이들 부문이 향후 우리나라 산업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12.7%, KIET 추정치)이 예상된다.

기계류 부문은 향후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으나 UR 영향으로 국제 분업형 산업 발전이 진전될 전망이다. 공작기계·섬유기계·건설중장비는 수출의존형이 가속화될 것이고, 농업용기계·중전기·과학장비는 내수 의존형의 전문화된 생산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화 가치가 100엔 달러 대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경우, 특히 일반산업기계류의 상당 부분의 생산기지가 한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소재산업에서는 철강 4.4%, 화학 8.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산업 부문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전자·자동차·조선 등 수출 산업으로부터의 국내 수요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1998년까지 전자·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가운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의 성장이 돌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 가치 상승,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소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력 유지에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21세기를 향한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1994.1. 산업연구원.

「UR타결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 1994.1.

「국제환경표준화 추진 동향과 기업의 대응」, 1994.1.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97」, 1993.9. 대한민국 정부.

엔터테인먼트산업 신시대. *Business Intelligence* 1993.8. 삼성경제연구소.

영상소프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의 대기업 집단. *Business Intelligence* 1993.6.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산업」, 1993. 한국산업은행.

「일본경제동향」 각호. 신한종합연구소.

「LG주간경제」, 1992~93. 럭키금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신문」, 1992~94.2월.

「매일경제신문」, 1992~94.2월.

「내외경제신문」, 1992~94.2월.

「서울경제신문」, 1992~94.2월.

「전자신문」, 1992~94.2월.

김영국. 1993. 성장 잠재력 큰 중국의 조선업. 「KIET 실물경제」, 10.6.

相田利雄·小林英夫. 1992. 「成長するアジアと日本産業」, 2月.

竹内 宏·鳥村浩二. 1990. 「日本産業21世紀へのトレンドを読む」, 3月.

「財界觀測」, 1992. 野村總合研究所. 6月.

中村元一監譯·崔大龍譯 1992.9. 「戰略經營 21世紀へのダイナミクス」, 産能大學出版部.